"전북, 장애보다 사람이 먼저"

민주 안호영 도지사 경선후보, 도지사 직속 상설 장애인위 설치 등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로 결선투표에 진출한 안호영 국회의원(재선,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장애보다 사람이 먼저인 평등한 전북을 만들겠다"며 장애인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안호영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 인식하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 후보가 밝힌 장애인 분야 7대 공약은 ▲도지사 직속 상설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인권 강화, ▲여성장애인 안전권 강화, ▲장애인 종합지원조례 제정 추진, ▲중증 장애인 상해보험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이다.

안 후보가 공약한 도지사 직속 상설 장애인위원회는 전북도 장애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위원회가 교육·노동·복지 등 각 업무에 따라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는 장애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장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또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간 교류·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아울러, "자립형 주택 확충을 통해 탈시설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성장애인의 안전권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시설과 쉼터를 설치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안호영 후보는 "그 제도적 체계로써 장애인종합지원조례 제정 추진을 제시했고, 이 밖에도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주도 사례처럼 전북 도내 심한 장애인에게도 타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보장이 가능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현재 820명 수준인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지역 특성에 맞춰 대폭 확충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내외 '국립수목원 기념식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해 기념식수를 마친 후 최병암 산림청장, 최영태 국립수목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해야"

양경숙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인사청문회에서의 공직후보자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준용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고발할 주체가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때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의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면서, 정작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오늘 靑 기자단 초청 행사… 5년 소회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퇴임을 보름 여 남겨둔 시점에서 5년 국정운영의 소회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만남 행사를 갖는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건너뛰었던 올해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성격의 자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의 그동안의 소회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를 밝힐지도 관심이다. /뉴시스

최정호 "위기의 익산 기회의 익산으로 대전환"

전 국토부차관인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위기의 익산을 기회의 익산으로 대전환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익산은 인구 급감, 좋은 일자리 부족,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국토도시교통정책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익산의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최 예비후보는 "익산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시급한 과제"라며 "글로벌기업 전진기지 구축을 통해 대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농촌과 식품.관광 산업을 접목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사람이 모이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익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인구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보 등 다양한 지역 현안 해법을 시민들과 함께 찾았다"며 "중앙정부에서 30여 년간 쌓아온 경험 및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정호 예비후보는 "민주당후보 경선이 치러지는 이달 25, 26일에 나 자신은 물론, 내 자식들의 미래만을 보고 최고로 일 잘하는 최정호를 꼭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임정엽 "우범기와 정책 연대"

전주시장 후보 경선 최대 변수 오늘 선언식 열고 공약 발표

임정엽·우범기 두 후보가 전주 대도약을 위한 정책연대를 선언하면서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24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민선시대 이후 30여 년 가까이 침체된 전주를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전주대도약의 기폭제는 우범기 후보의 시장 당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부당성과 억울함을 각계에 호소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철학을 평생의 신조로 살아온 저로서는 당과 운명을 함께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오직 전주와 전북 발전에 힘을 쏟고자 한다"며 중대 결심의 심정을 토로했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민선 이후 30년 가까이 침체에 빠진 전주에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당 정신으로 무장한 우범기 후보와 대도약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한다"며 우범기 예비후보를 정책연대 선언의 파트너로 지목한 이유도 밝혔다.

임정엽·우범기 후보는 또, 25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정책연대 선언식을 갖고, 양측이 그동안 수립한 공약을 토대로 10대 대표공약과 100대 세부공약을 번갈아 발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우범기 후보는 "여러 차례의 방송사 토론회에서 임정엽 출마예정자의 한옥케이블카 등 주요 정책이 전주를 변화시킬 알찬 공약"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연대를 제의했고, 이에 따라 대표공약과 세부공약의 구체적인 연대가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상 기자

"예산확보 역량 갖춘 후보 선택해달라"

우범기 전주시장 경선 후보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가 "모든 정책의 시작은 예산이다. 기재부에서 예산확보 역량을 갖춘 '준비된 예산해결사'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우 후보는 지난 23일 "정권이 바뀐 전북의 입장에서 정부의 예산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다"며 "국가예산 확보방법을 아는 전문가가 전주시장이 돼야 예산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에서 활동해본 적 없는 우물 안 개구리는 전주가 맞닥뜨린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예산확보 역량에 폭넓은 관료 경험과 행정력을 더해 전주의 대변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생활 대부분을 예산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우 예비후보는 경제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중앙의 다양한 인맥을 자산으로 정부예산 확보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해결사'의 역량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우 후보는 지난 22일 "신도시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 또는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에코시티에 전라중 이전은 물론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군민들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

장영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

무원칙, 제멋대로 갈라 치기 민주당 공천 행태에 대결 장영수 전북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장영수 예비후보의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당과 본격적인 대결을 예고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장수군청 브리핑룸 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그는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별 공천 심사를 두고 '갈라 치기 하는 공천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수사를 받는 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존중하지만, 억울한 심정에 이제 군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고자 한다"라고 무소속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가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에 의거해 정당함을 당에 호소했지만, 당은 저의 마지막 호소마저 외면하고 말았다"라고 억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막상 당을 떠나겠다는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나니 전북도의원으로 재선과 장수군수 선거에서 실패를 거쳐 당선됐던 지난 20년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말로 눈물을 대신했다.

군민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임을 천명한 그는 "불의와 싸우고 마타도어 정치를 끊어내기 위해서 장영수를 향한 군민 여러분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이제 군민 후보로 나서 당당히 군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적 고발조치를 했고, 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라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름다운 61초 영화제' 공모전 28작품 선정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아름다운선거 61초영화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전북선관위 김영갑 사무처장과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임대근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심사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상 및 수상작품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61초 초단편 영상을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6월 1일을 알리고, 선거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북선관위'와 '문화콘텐츠연구소 시네숲'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총 118작품이 출품돼 심사결과 일반부 14작품, 청소년부 14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일반부는 배유미 님의 '그 길에, 대한민국이 피어납니다' 작품이 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고, 청소년부는 원형이정동건 팀의 '공정한 참여가 미래의 희망입니다' 작품이 대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유호상 기자

이한기 "용담댐 실향민 귀향 프로젝트 추진할 것"

이한기 진안군수 예비후보가 각종 규제로 지역낙후 피해를 입고 있는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의 직간접 피해보전을 현실화하고 고향을 떠나 외지를 떠돌고 있는 '용담댐 실향민 귀향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용담댐 수몰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타지로 떠났던 실향민 중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 경제적 기반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수공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용담댐 실향민 귀향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용담호 용수를 사용하는 전주시 등 지자체가 기금 출연한 수질관리 공동기금을 조성해 수질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 광역·기초의원 비례 출마자 66명 접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관위)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전북도 광역의원비례대표와 기초의원비례대표 선거 공모 공고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광역의원 비례대표엔 총 11명(여성 4명, 청년 3명, 장애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엔 총 55명(여성 49명, 청년 5명, 장애 2명)이 후보자로 접수했다.

지난 22일부터 서류 심사에 들어간 전북도당 비례대표공관위는 이번주, 회의를 통해 후보자 선출 심사 기준 등을 확정,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당 지방선거 기획단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시민배심원단을 모집, 공개 오디션을 통한 선출 방안 등을 권고, 추후 비례대표 공관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운 비례대표공관위원장은 "비례대표 공관위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계층과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 지방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마중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의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특정학교 총동문회가 A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치를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기자